

## 헌 법

1. 甲은 현직 대통령으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자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에 대해 헌법적 대응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와는 별개로 甲의 위헌·위법행위가 내란죄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甲에 대한 형사소추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국회가 甲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국회의 甲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서가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甲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파면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일로부터 甲은 대통령의 신분을 잃게 되므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된다.
- ⑤ 甲의 탄핵파면은 대통령의 궐위 사유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파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원리는 모든 국가기관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로 귀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일수록 그 기관은 국민들의 대표성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도출시킨다. 그리하여 입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행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 권한이 강할수록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필요성이 큰 것이다. 헌법재판 역시 그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행하는 것이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에 논리적으로 부합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소수자 보호와 과거의 세대와 현재 및 미래의 세대에게 아울러 적용되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다수자와 현재 세대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소수자의 보호와 항구적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의회입법이나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은 당사자인, 현 세대의 대표자(대의기관)가 직접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로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될 것이다. 이 지문에 대한 취지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헌법재판은 독립된 전문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다.
- ③ 헌법재판은 헌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관이 다수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다.
- ④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일수록 그 기관은 국민대표성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
- ⑤ 정치적인 규범인 헌법의 해석을 주된 업무로 하는 헌법재판은 정치적 판단이므로 사법적 통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3.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국가의 최고지도이념을 천명한 중요한 헌법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전문은 헌법 규범적 효력이 없는 상징적인 내용을 천명한 부분이다.
- ② 현행 헌법전문은 저항권의 정신을 수용하고 있다.
- ③ 현행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 ④ 현행 헌법전문은 평등 이념을 선언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 ⑤ 현행 헌법전문은 개정 횟수와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다.

정답

1. ④ (상)    2. ④ (중)    3. ① (하)